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지난달 '뉴스 콘텐츠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의 뉴스 소비 환경 변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네이버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왔던 뉴스 편집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공간과 기술만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 즉, 지금까지는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들을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선별해 포털 사이트에 노출시키고, 해당 기사의 댓글들도 네이버가 관리해왔지만 이를 다시 언론사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이르면 올 가을부터 △메인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제외하고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편집하는 '뉴스판' '뉴스피드판'을 신설하는 한편 △뉴스별 댓글 허용 여부 및 정렬 방식도 저작권자인 개별 언론사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내에서 기사를 보여주던 기존의 '인링크' 방식을 벗어나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도 도입한다.

네이버의 이 같은 발표 이후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언론 환경이 정상화 되고, 여론 조작 논란을 촉발시켜왔던 댓글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반쪽짜리 개편에 불과한 미봉책이다"라는 비판도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수많은 사용자들이 뉴스를 올바르게 수용하려면 어떤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보자.

“여론 왜곡한다”는 지적 받아들여 개선안 발표

네이버는 “뉴스 소비 경로를 다양화해 여론 왜곡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 5월부터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2004년, 뉴스에 ‘댓글’ 기능도 추가해 서비스를 해오면서 그동안 국내 최대 온라인 뉴스 공급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시장조사업체 오픈 서베이가 지난 3월 발표한 ‘소셜미디어와 검색 포털에 관한 리포트’에 따르면 “검색 포털로 네이버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75.2%에 달할 정도. 다른 분석에 의하면 네이버의 일평균 방문자는 3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듯 뉴스 공급에 있어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네이버를 향해 그동안 “여론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

난 2012년, 제18대 대선 국면에서 터져 나온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을 비롯해 최근 ‘드루킹 댓글 조작’이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이 연이어 발생되고 댓글을 통해 적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양산되자 “네이버가 제공하는 기사 및 댓글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

특히 뉴스 기사 댓글 기능은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건강한 여론 형성의 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누리꾼들의 싸움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런 사회적인 요구가 계속되면서 네이버는 뉴스 편집과 댓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한 것이다.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네이버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책에 대해선 모두가 만족하고 있을까? 다수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네이버가 사실상 독점해온 뉴스유통구조를 바꾸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네이버가 발표한 ‘아웃링크의 선택적 도입’은 ‘꼼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 네이버는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희망하는 언론사에 한해 개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많은 언론사들이 온라인에서 경쟁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상 아웃링크로 전환할 언론사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래픽과 광고 수익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모험을 할 언론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 한 전문가는 “아웃링크의 선택적 도입이 시행될 경우, 어느 한 언론사라도 아웃링크를 선택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라면서 “입법화를 통해 일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네이버 측이 최근 각 언론사에 아웃링크 전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0개 매체 중 약 70%가 회신했으며 이 중 절반이 유보적 입장이고,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처럼 인링크 방식을 희망했다고 밝힌바 있다.

일각에선 네이버는 언론사가 아니므로 뉴스 서비스를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언론학자는 “네이버는 언론사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이므로 언론사와 논의를 거쳐 뉴스 서비스를 접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네이버도 뉴스 콘텐츠에 의존하는 사업모델을 탈피해야 플랫폼 모델로서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 절실... “네이버는 구글을 본받아야”

네이버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야심차게 개선안을 내놨지만 그 개선안도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 수많은 온라인 사용자들이 올바르게 뉴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사실상 네이버의 뉴스 독점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이므로 이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결국 독점 해체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경쟁자가 등장해 네이버가 주도하는 시장에 균열을 만들어내거나, 언론사들이 힘을 모아 ‘공동 포털 운영’과 같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현재 국회에 제출된 포털 사이트 댓글 규제 관련 법안이 13건이나 되는 만큼 정치권이 네이버 독점의 폐해를 막을 입법에 박차를 가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1위 검색 엔진인 구글은 어떨까? 공공롭게도 네이버가 개선안을 발표한 날, 구글은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는 ‘구글 뉴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한 언론학자는 “구글 뉴스는 아웃링크 방식도 유지했고 언론사와의 상생을 목적으로 발표한 모델로 꼽힌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면서 “구글 관계자가 “구글 뉴스 앱은 언론사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네이버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검색 엔진으로 시작한 구글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원천 기술에 투자해 미래 기업으로 진화해가고 있는데,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 사업에만 집착하다가 미래가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각해볼 문제

1. 네이버가 뉴스 편집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게 된 배경을 조사해보자.
2. 네이버의 이번 발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해보자.
3. 온라인 사용자가 뉴스를 올바르게 수용하려면 어떤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눠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① VIII. 문화의 이해

사회① X II.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참고자료

동아닷컴, 2018년 5월 9일자, 첫 화면에서 뉴스가 사라진다...?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 개편안 발표

지도법

중학생들이 '뉴스 편집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뉴미디어를 통해 다량의 뉴스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만큼, 뉴스를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뉴스 편집권의 개념과 이것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개념을 학습한 뒤 네이버가 내놓은 제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장단점을 말해보는 활동을 수행하면 학생들이 이슈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의 뉴스 편집권 포기 선언이 여론 형성과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학급 친구들과 논의하도록 하면, 네이버의 시스템 개편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대안 등을 고민하며 사안을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